



1946년 3월 창간 제 2688호

湖南新聞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3월 14일 (음력 2월 8일) 목요일

“5·18때 시민 폭도 날조한 신군부 공작 규명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무력 진압과 정권 찬탈의 명목을 확보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지속적으로 흘린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공작 경위를 면밀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18기록관은 각종 군 기록물과 군 관련 자의 증언 등을 분석해 ‘5·18 편의대 정밀 투시’라는 보도자료를 14일 펴내 이 같이 밝혔다.

편의대란 사복 차림으로 첩보·정보 수집·선동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뜻한다.

1980년 5·18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광주 505보안부대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으며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홍성을 1군단 보안부대장, 최예섭 보안사 기획조정실장, 최경조 합수본부 수사국장, 박정희 중앙정보부 과장 등을 광주

5·18기록관 ‘편의대 정밀 투시’ 자료 공개

홍성률 대령·보안사 17명 공작 기획 총괄

“전두환-5·18연관 행적 명명백백 밝혀야”

로 보내 편의대를 운용했다.

편의대는 광주시민을 폭도로 광주를 폭동의 도시로 날조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편의대의 성공으로 전두환씨가 권력을 빼앗을 수 있었다고 5·18기록관은 설명했다.

편의대는 홍성을 대령이 광주로 향할 때 동행한 보안사 요원 17명과 함께 공작 기획을 종괄한 것으로 분석됐다.

편의대 소속 요원의 정확한 수는 확인되지 않지만 정보사령부·전교사·505보안부대·20사단·31사단 장교·병사, 3·7·11 공수여단 보안대원·심리전 요원, 경찰 정보 보팀 등으로 광범위하게 꾸려졌다.

이는 ▲첩보·정보 수집 ▲주동자 색출·체포 ▲시위대의 위치·무장 상황 파악 보고 ▲시위대의 모략·교란 ▲선무공작 ▲지

역 감정 조장 ▲무장 필요성 조장 ▲시민과 시위대의 분리 공작 등의 특수임무를 맡았다.

특히 편의대는 사진병을 투입해 자극적인 시위 장면만 골라 유행 일정 폭도공작용 사진(사진)하고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 일부 민간인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두환이 지원한 가발도 1980년 5월26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편의대 활동은 군 기록물에서도 다수 나타난다. 전교사 작성 ‘광주소요사태 분석’ 100쪽에는 ‘2군사령관·비둘핀식 분할 점령, 과감한 타격, 다수 편의대 운용 등 지시 라고 적혀 있다.

같은 문건 141~143쪽에는 ‘선무활동 중점·수단에 편의대 활용(접촉 계동)’이라고 기록돼 있고 5월22일부터 26일까지 첩보 수집과 대민 계동활동을 했다고 적었다. 전교사 작전일자에서도 선무공작요원들의 이동 경로가 기록돼 있다.

보안사 빌간 5공화국전사에도 5월27일 (도청)재진입작전 수립시 계엄군 축 편의대가 파악한 각종 정보들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됐다고 평가한 기록이 있다.

실제 편의대는 전교사·보병학교·하사를 위장시켜 5·18 시민군 간부를 맡게 유도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도청 상황실에 들락거리며 지정 ‘조사반·정보반’ 등의 명칭을 붙여서 활동했다.

“홍성을 대령과 서의남 중령 등이 공수부대와 시위대를 동시에 자극하는 단방향으로 유언비어를 개발해 편의대에 넣어주고 유포하도록 시켰다”는 허장환 505보안부대 수사관의 증언도 나왔다.

나의감 5·18 기록관장은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5·18은 공작으로 시작해 공작으로 끝이 난다”며 “정권 찬탈이란 ‘못된 꿈을 광주에 적용한 전두환을 5·18 종사령관으로 규정하고, 그의 보안사를 ‘공작 부대’로 설정해 5·18 연관 행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구례 3·1만세운동 재현
13일 구례 독립만세운동의 첫 발상지였던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 장터에서 김순호 구례군수, 독립유공자 후손, 보훈단체, 학생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운동 100주년을 기리는 만세운동이 재현되고 있다.

검찰 “조합장 동시선거 402명 입건…372명 수사중”

금품제공 선거사범 61.4%…6명 구속 수사
9월까지 수사…기소 시 ‘당선무효형’ 구형

지난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현재까지 400명이 넘는 피의자가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4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사범 402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372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1명은 재판에 넘긴 상태이며, 9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372명은 수사 중이다. 6명은 구속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전원은 선거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당선인은 총 86명으로, 2명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82명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15년 제1회 조합장 선거일 기준 전체 입건 규모는 8.9% 증가했으며, 이중 금품 선거사범이 247명(61.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거짓말 선거사범은 77명(19.2%), 조합임직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는 11명(2.8%)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9월13일

까지 각 지방청에 전담수사반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기소된 당선인에게는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전국 1344곳에서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는 총 3474명이 후보자로 등록했으며, 평균 경쟁률 2.0대 1을 기록했다. 선거인수는 221만977명으로 지난회 대비 8만 609명 감소했다.

서은홍 기자



작전 성공?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하게 항의를 할으로서 오히려 나 원내대표를 용으로 만들어준 결과를 초래하고 양비론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민주당도 몇 번의 항의를 할 수는 있지만 들어줘야 한다. 오히려 국민들, 또 언론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이 부적절했지만 민주당의 대응도 시련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이 시나는 진행자의 말에 그렇다’고 동의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9 최우수축제

제41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2019. 3.21. 목 ~ 3.24. 일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

만남이 있는
신비의 바다로!

진도 바다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Welcome to Jindo!

주최 Jindo

주관 (사) 진도관광협동조합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